

# 내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555조원 규모... 법률안·대통령안·일반안건 등 총 42개 심의·의결

원자력안전법개정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정부 예산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대통령령안·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1

건, 일반안건 11건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8.5%(포인트)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주기적인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사능폐기장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도 심

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올해 발생한 호우·태풍 피해 복구에 한해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례없는 기록적 호우에 지자체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이 밖에 전날 후보자로 지명된 원인철 신임 합동참모본부의장에 대한 국방부 인사발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될 예정이다. /뉴시스

# ‘홍수 피해 걱정 없는 농업생산 기반 위해’

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순창군민 서명활동 돌입

침수된 유등·풍산면

배수 개선사업 필요성 호소



리구역과 순창군 관리구역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배수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등면과 풍산면은 배수 개선사업 등 추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이 물난리 걱정 없는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1일부터 순창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했다. 순창군은 지난달 7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순창군은 지난달 7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풍산면과 유등면은 농경지 80ha와 하우스 56동 5.6ha 등 농경지와 시설물 피해가 커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상태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발생시 상습 침수구역이어서 올해처럼 폭우가 반복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 부의장이 순창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습침수구역인데도 농어촌공사 관

가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농민들 역시 농업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어 유등면과 풍산면의 배수 개선사업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유등면과 풍산면이 특히 피해가 심했는데 앞으로 이런 물난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수장과 배수문, 유수지 설치 등 종합적인 배수 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순창군민들의 호소문은 군민들의 서명을 받는 대로 송하진 도지사와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겐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영일 부의장은 섬진강댐 부실 관리로 인한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원내에 민생·경제 정기국회 지원단 설치

민주 ‘국감 대비, 입법·예산 관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원내에 민생·경제 정기국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준비에 돌입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 지원단의 취지와 목표는 국정감사 및 입법과 예산 관리라며 정기국회 내 정국 이슈 주도 등을 통한 수권정당의 신뢰 강화(도 목표)라고 전했다.

지원단장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총괄실장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맡는다. 지원단 내 ▲대전환태스크포스(TF) ▲국정감사 상황실 ▲입법·예산지원단 등의 3개 조직이 꾸려진다.

대전환TF팀장은 조승래 선임부대표, 국정감사 상황실장은 전재수 선임부대표가 각각 맡기로 했다. 입법·예산지원단장은 새로 선임되는 정책위 수석부대표가 맡는다. 정기국회 지원단은 오는 3일 출범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대해선 “지도부 차원에서 시급하게 보는 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법안, 돌봄휴가 관련 법과 예산, 민생을 챙기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3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 계획이었던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맞춰 국회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내달 7일 이를 활용한 비대면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정할 상임위별 분임토의는 계획대로 3일 오후 실시될 예정이다. /뉴시스

## 마스크·칸막이로 ‘무장’... 정기국회 개회식 풍경

287명 본회의 재석  
윤리특위 안건 가결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는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방역 ‘완전 무장’ 상태로 치러졌다. 사진은 비밀 차단 칸막이가 설치된 국회 본회의장.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는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방역 ‘완전 무장’ 상태로 치러졌다.

국회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지난 30일까지 봉진이 일시 폐쇄됐던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한 모습이다. 이날 가결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안건 표결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287명이 본회의에 재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0년 정기국회 개회사를 낭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의장석 마이크에는 비밀 차단 덮개가 씌워졌다. 의사진행을 하는 동안 박 의장의 안경에 여러 차례 김이 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도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발언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본회의장 내 모든 의석에는 비밀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됐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개회식 애국가 제창 때도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모든 참석자들은 발열 체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 역시 최소한의 인원만 허용됐다. 이에 기자들은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를 통해 본

회의를 취재했다. 평상시 회의 전후로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던 의원들은 칸막이 안에서 자리를 지켰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이지만 헌법기관의 공무수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뉴시스

## 통합, 새 당명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 ‘4연임 금지’ 제외

미래통합당이 1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공식 개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상정하

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 및 정강·정책 개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

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나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놓고 정강·정책이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하자, 비대위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상정했다.

/뉴시스

## 소방청장 “의사 집단과업에 119 이송지연 최대한 줄인다”

정부, 119구급대 경증환자 대형병원 이송 자제

정문호 소방청장은 1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회(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없도록 상황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의사 집단과업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 장거리로 이송한 사례가 몇 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과거에는 그런(이송 지연) 사건이 없었다”며 “의사 집단과업 상황을 모니터링해 병원(병상)가용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안관리 해 나가겠다”고 했다.

119구급대는 환자 발생 시 가장 가

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내 이송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가 울산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해 어느 때보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대형병원에서는 응급·수술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치료를 축소하고,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19구급대의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송도 자제하도록 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